



금속노조통신

2026-5호

발행일 2026년 1월 26일(월) | 발행인 박상만 | 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금속노조 | 편집 선전홍보실 ☎ (02)2670-9507

“이재명 정부는 지엠 집단해고·구조조정 방관 말아야” 금속노조, 한국지엠 특별근로감독 촉구... 청와대에 항의 서한 전달



한국지엠 원·하청 노동자들이 이재명 정부가 한국지엠 구조조정에도 손 놓고 있다며 정부 역할 부재를 비판했다. 한국지엠 사측에 집단해고 취소와 직영정비센터 정상화를 요구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지엠부품물류지회와 한국지엠지부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의 세종물류센터 하청 노동자 120명 해고와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는 명백한 구조조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지엠 상황 외면 말고 시급히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허원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노동자는 대한민국 헌법 33조와 개정 노조법 2조에 따라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한국지엠 원청은 한국 법·제도를 무시한 채 지엠부

품물류지회 조합원을 집단 해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 무책임을 꼬집기도 했다. 허원 노조 사무처장은 정부가 한국지엠 집단해고와 직영 정비 폐쇄 문제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허 사무처장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 어마한 시민 세금을 받은 지엠이 한국에서 불법과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데 한국 정부는 왜 침묵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허원 사무처장은 정부를 향해 한국지엠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를 비롯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삼권과 원청교섭 등 노조법 2조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지엠 사측에 세종물류센터 집단해고와 직영정비센터 폐쇄 취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안규백 노조 한국지엠지부장도 이재명 정부가 한국지엠 구조조정 문제에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안규백 한국지엠지부장은 “한국지엠의 직영 정비 폐쇄와 세종중앙물류센터 집단해고는 정부가 그간 외국인 투자기업을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안규백 지부장은 정부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완성차 제조사가 정비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업 축소와 정리를 선언한 것이다.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에 지원한 공적자금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산업통상부는 지속 가능한 자동차산업 발전과 한국지엠 구조조정 대응을 위해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 지부장은 “한국지엠 직영 정비 전면 폐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토교통부 역할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용태 노조 대전충북지부 지엠부품물류지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한국지엠 원청은 현재 부품 배송 지연 책임을 노동자에게 덮어씌운다. 하루아침에 잘린 노동자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부당해고 등 지엠 자본이 저지른 불법이 지금 한국지엠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지엠부품물류지회장은 “정부가 나서서 한국지엠 불법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 특별근로감독에 즉각 나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용태 지회장은 한국지엠 작업복을 가리키며 “한국지엠은 집단해고 취소하고 고용승계 즉각 이행해야 한다. 한국지엠이 불법을 멈추면, 노동자들은 지금이라도 현장으로 돌아간다. 교섭장에서 만나 얘기하자”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김용태 지엠부품물류지회장과 안규백 한국지엠지부장은 청와대에 한국지엠 구조조정 규탄과 정부 역할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어 노조는 서울고용노동청으로 자리를 옮겨 지엠부품물류지회, 한국지엠지부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한국지엠 특별근로감독 즉각 시행을 요구했다.

이날 지엠부품물류지회는 한국지엠 세종중앙물류센터 농성 52일 차, 한국지엠 부평공장 서문 앞 농성 17일 차를 맞았다. 한국지엠지부 ‘직영 정비 사수’ 여의도 산업은행 철야농성은 72일째다.

